

원전 피해 재조사·보상 '물꼬'

한빛원전 주변 환경조사에 부안 어민·전문가 참여 이원택 의원, 한수원 본부장으로부터 협의 답변 얻어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서 2022년부터 3년간 시행하는 '한빛원전 주변 환경조사'에 부안군에서 추천하는 어민들과 해양전문가가 참여해, 해양 생태계 조사 및 온·배수 확산방위 등을 조사하게 된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남요식 한수원 본부장(부사장급)으로부터, 한빛원전 주변 환경조사에 부안군 어민·전문가 참여와 지역 상생방안을 지역 주민들과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는, 한빛원전 5~6호기 가동에 따른 피해조사에서 부안군이 배제됐고, 피해보상에서도 배제돼 부안군이 끊임없이 피해 재조사와 피해 보상을 요구한 지, 22년 만의 일이다.

이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한수원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부안군이 피해조사와 피해보상에서 부당 배제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작년 국감 이후 부안군과 어민대표, 한수원 측이 3차례의 대책회의를 했으나 입장 차이만 보이며, 뚜렷한 결론이 없다"고



값진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안군 어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빛원전 주변 환경조사를 통해 어민들의 피해를 철저히 검증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한수원은 원전주변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원택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박현규 한전 부사장에서부터 현재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수산분야 산지위판장, 폐사어 처리장 등을

농사용 전기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 전 전기요금 약관 개정을 관계부처와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의원은 "재래식·개방형 산지위판장을 저온·청정위판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해수부의 방침"이라며 "신선도가 생명인 수산물을 유통하기 위한 저온·청정위판장으로 전환되면 막대한 전기 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도 산지위판장의 농사용 전기 적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산분야도 농업분야와 동일하게 농사용 전기 적용을 받아야 한다"면서 "해수부가 한전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당헌·당규 따라 결선투표 반드시 진행해야"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 홍영표, 설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동관에서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이라며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임대주택 경쟁률 1년 동안 3배로 '쑹쑹'



공무원연임금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 모집 경쟁률이 1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이 '공무원연임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여덟 차례 진행된 공무원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23대 1에서 7.8대 1까지 지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임금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네 차례의 모집(2월, 4월, 6월, 8월)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4월에 모집한 충남 내포(47㎡형) 1세대 모집에 61세대가 신청해 61대1을 기록했으며, 이어 8월 모집 광주 송정(59㎡형) 56대1(1세대 모집, 56세대 신청), 8월 모집 충남 내포(59㎡형) 40대1(2세대 모집 80세대 신청)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모집에서 미달이었던 세대도 올해 8월 모집에서는 모두 1: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작년 9월 미달이었던 피주 교하(24평형)는 올해 8월 모집에서 3대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무안 남악, 마산 교방도 올해 3대 1을 기록했다.

한병도 의원은 신규 물량 확충 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고, 나아가 상대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부족한 지역의 불균형 또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유호상 기자

도의회, 31일까지 도정

교육행정 전반 도민 제안

전북도의회는 다음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오는 31일까지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도민 제안을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도민 제안은 누구나 가능하며, 제안 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행정,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 사항 예산 낭비 사례, 도민 불편 사례 등이다.

도의회는 접수된 제안을 분석해 오는 11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열리는 제388회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인신공격 또는 허위제보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 제안 등은 접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안 방법은 전북도의회 홈페이지(www.assem.jonbuk.kr) 방문 및 이메일(wjwo03@koreakr), 우편·직접 방문을 통해 제안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비공개, 제보내용은 공개될 수 있다./유호상 기자

도의회 상임위 현장의정활동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8일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추진상황 점검에 나섰다.

"교육정책 방향 탐색 필요"

교육위, 부안지역 학교통폐합 상황 점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지난 8일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추진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날,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인구절벽시대 도내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이 필요하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이는, 그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주도해왔고 다른 학교와 통합하거나 분교를 폐지하는 방식, 분교를 분교로 개편한 사례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급이 다른 학교를 묶는 통합운영학교로 개편한 사례가 있지만, 도내 교육현장에서의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2016년부터 교육부가 적정규모화 사업, 즉 학교 통폐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지만 통폐합에 대한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희수 위원장은 "학교는 사라지지 않고 체육·문화·복지·의료 등 다양한 지역 공공시설과 함께 학교가 개발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특성화 교육 여건 개선·교사

전문성 전환·교육시설 환경 개선·디지털화 등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일(순창) 의원은 "학교통폐합에 표준화된 학교교육과정 대신 실생활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학령인구 급감과 함께 고령화도 가속화되는 만큼, 학교를 지역 주민 모두를 위한 평생 학습·복합공간으로 개편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김정수(익산) 의원은 "통폐합을 할 경우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예산이 절감된다는 효과가 있지만, 통폐합으로 인해 통학거리가 멀어지는 등 불편함이 생긴다"면서 "특히, 폐교에 따라 지역인구가 줄어드는 등 위축이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며 단점을 지적했다.

강용구(남원) 의원은 "학교통폐합보다는 소규모 학교를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적정규모화 사업, 즉 학교 통폐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지만 통폐합에 대한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일본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 교육·보육·의료·문화 등 공공서비스를 잘 구축하고, 특색사업과 결합하는 방식으로 자원을 집약했다"면서 "또, 인근 마을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유지했기 때문에 지역간 소용돌이 필요"라고 강조했다.

"임산물 가치 향상 사업 지원 노력"

한복위, 정읍 임산물 체험단지 주요시설 점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지난 8일 정읍 임산물 체험단지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위원들은 차장문 화관 향기온실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즉석카페를 통한 임산물 즉석체험 등 주요사업을 청취했다.

임산물 문화관광 인근에 조성된 임산물 체험단지는 지난 4월 개관해 먹거리 판매와 다채로운 힐링·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임산물을 활용한 특화제품 개발과 임산물 생산능력의 소득증대 체질관망 활성화를 위해 조성됐다.



이명연 위원장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역민의 휴식과 치유를 위한 공간이 조성돼 기쁘다"며 "임산물을 통한 힐링 뿐 아니라 임산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임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철저"

행자위, 전주·완주·군산지역 대상지 찾아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지난 8일 전북도에서 제출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전주·완주·군산 지역 사업대상지 6곳을 방문,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자위원들은 세계세비미안 날래군 검림 및 노송·구이·잔미·경암·금동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사업과 관련해 현장을 찾아, 공유재산 취득이 행정수요나 도정 정책에 꼭 필요한 것인지와 대상부지가 행정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최적지인지 등에 대해 살폈다.



문승우 위원장은 "공유재산은 도민 전체의 공적 재산으로 취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부지가 적정인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유호상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사랑은 내리사랑? 이제 농지연금으로 올림사랑 하세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자식 걱정 끝이 없던 우리 부모님 이제껏 받아온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공평하게 따져보고 부모님께 농지연금을 선물하세요.

농지연금이란?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는 제도로서 경작이나 임대로 인한 추가수익도 가능하고, '승계형' 가입 시 부부 모두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1577-7770 (www.fb.or.kr)

지원대상	대상농지	연금수령액	가입혜택
· 농지를 소유한 만65세 이상 농업인/ 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 (월 3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지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농지연금